

제12권 10호

2022. 5. 16~2022. 5. 29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새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 |
| 이슈분석 | 최근 연금시장의 동향 및 전망 |
| 금융경영브리프 | Capgemini, 전통 은행들에 개인화된 가치 제공 제언
미래 의료의 청사진 디지털 헬스케어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美 고강도 긴축+경제 연착륙, 가능할까?
외 환 : 최근 급등은 과도하나 불안 요인도 多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신석영(seouyoung.shin)

논단

교수 손재영

이슈분석

연구위원 정희수(heesoo_jung)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이재완(jwan.lee)
수석연구원 이기홍(kihong.lee)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수석연구원 최제민(jeminchoi)

금융지표

연구원 김종현(jh.kim)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새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
- 06 **이슈분석** 최근 연금시장의 동향 및 전망
- 10 **금융경영브리프** Capgemini, 전통 은행들에 개인화된 가치 제공 제언
미래 의료의 청사진 디지털 헬스케어
- 14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美 고강도 긴축+경제 연착륙, 가능할까?
외 환 : 최근 급등은 과도하나 불안 요인도 多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새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jyson@konkuk.ac.kr)

새 정부 주택 공약의 핵심은 250만호의 대규모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청년층 등 무주택자의 주택대출 확대, 전반적인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등이다. 주택시장의 복잡한 양상을 감안하여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신속한 주택정책 전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정국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왜·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약 추진방안을 정밀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택정책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이번 대선에서는 일찍부터 부동산 공약이 승부처가 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세 부담이 늘어 집을 가진 사람들이나 못가진 사람들 모두가 힘들고 고단했기 때문이다. 두 주요 후보가 모두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였지만, 이재명 후보가 과감하게 문 정부와의 단절을 강조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이 후보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정책실패를 심판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새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 방향은 달리 분석할 필요도 없이 당선자의 공약집에 잘 나와 있다. 경쟁 후보의 공약도 당선자와 유사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해 여야간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공감대가 유지된다면 새 정부의 정책전환이 순조롭겠지,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을 전망이다. 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새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터 점검해서 공감대를 넓혀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주택정책의 출발점은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가 꼭 필요하지만, 주택이 워낙 비싸므로 정부가 국민 다수의 주거를 책임지기는 힘들다”는 현실 인식이다. 이 때문에 ‘계층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만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경제적 약자들도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출발점은 정부가 국민 다수의 주거를 책임지기 힘들다는 현실인식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산층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주거를 해결하도록 하되 금융, 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면 지원한다. 고소득층에게는 정부의 지원과 간섭을 모두 최소화해도 무방하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하위시장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생태계

문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보다 서울 강남 등 고소득층 주택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주택대출을 막고, 세부담을 급격히 올리며,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주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택시장이 다양한 하위시장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생태계란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전임 국토부 장관이 “주택을 빵처럼 밤새 구워낼 수 있다면...”하고 한탄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담당 장관이 그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새 정부 공약의 핵심은 250만호의 대규모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청년층 등 무주택자의 주택대출 확대, 전반적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 등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의 복잡한 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신속한 정책전환이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공약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정밀하게 가다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책기반: 다주택자 역할 재인식

반복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

주택정책이 세제, 금융, 규제, 공기업 운영 등 워낙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 부문의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정책전환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문 정부의 주택대책이 25번 이상 나왔는데, 그 하나하나가 시장이 큰 충격을 주는 것들이었다. 그 가운데 일관되게 반복되는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 조치들이었다.

세제만 보더라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이 모두 다주택자에게 차별적인 과표산정, 중과세, 감면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액에 따른 누진세율에 다주택에 대한 제재조치들이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1960년대에 시작된 투기억제 정책의 연장이지만, 조세의 실효성이 높아졌으므로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그들이 주택가격을 올리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리이지만, 이런 인과관계는 증명된 바 없다.

주택시장은 약 2천만의 가구가 그 만한 수의 집을 찾아가는 거대한 게임이다. 이 큰 규모의 시장에서 일부 ‘사람’들이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없다. 주택가격은 거시적, 미시적 ‘변수’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유동성이든 저금리든 공급 부족이든 그 변수들의 동향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60여년 간의 투기억제 정책들을 돌이켜 보면 2~3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된 경우를 찾기 힘들다.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접근으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투기억제 정책은 언제나 희생양 찾기일 뿐이었다.

역대 정부들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투기를 정의하고 대책을 내놓았고,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벌주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로 집 값이 안정되었는지,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개선되었는지, 국민들의 미래가 밝아졌는지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다주택자의 긍정적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첫째로, 다주택자는 주택 임대시장에서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전체 가구 중 자가거주자 1,146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66만 가구를 제외한 723만 가구가 민간 임대인으로부터 셋집을 구해 살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자의 다수가 다주택자들이다.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이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고, 중대형 주택의 경우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주택자 증과세는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를 올리며,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늘린다.

둘째로, 다주택자는 주택경기의 자율조정기능을 한다. 주택 개발시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이 발생할 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를 소화함으로써 주택개발의 리스크를 줄인다. 유통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여 가격 안정화 효과를 가진다. 이런 시장 자율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주택경기 진폭이 더 커지고,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로, 고령 다주택자는 임대수입으로 스스로 노후 생계를 해결하여 복지제도의 부담을 덜어 준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것은 자산운용을 오로지 채권과 주식에 한정하라는 강요인데, 이런 자산운용이 노후의 안정적 생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긍정적 역할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면 내가 가지지 못한다”는 단순 논리이지만, 주택시장은 복잡한 인과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제도 틀 속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다주택자 제재만 중단해도 모든 제도, 특히 부동산 세제가 훨씬 단순화되어 많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이다. 어느 분의 컬럼에 나온 예시처럼 “4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올해 보유세는 1,900만원 정도인데 18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7,000만원에 육박해 세 배가 넘게 되었다”는 상황은 어떤 개념을 동원해도 정당화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지만,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로 정상 과세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정책과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난 몇 년간 모든 지역의 주택가격이 올랐지만,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이 두드러졌는데, 대략 2015년 전후부터 신축 아파트가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졌고,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벌어진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신축 아파트 공급의 주요 경로인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는데 주력했다. 안전진단 기준을 높이는 등 인허가를 까다롭게 하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공공주도 개발 등 여러 걸림돌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기존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가격 상승세가 다른 주택들로 확산되었다.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노력을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관리했다면 충분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었을 것이고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을 것이라 아쉬움이 있다.

재건축·재개발은
민간 스스로의
실질적인
도시재생 사업

정부가 인식하든 말든 지은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에 맞추려면 낡은 주택들을 정비할 필요가 크다. 재건축·재개발은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민간 스스로 주거여건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도시재생 사업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이들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매년 바꾸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1] 2000년 이후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62%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와 같이 동시다발적 사업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전세난, 인프라 과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책추진 체계: 의도된 경직성

정책 실행 측면에서는 범정부 및 학계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하는 종합 시스템, 예컨대 지금보다 책임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든 집권당이든 주택정책의 근간을 너무 쉽게 흔들고, 그 때마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동 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준하는 독립적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의 주택대책들은 주로 단기 경기변동에 집중되어 중장기에 일어날 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주택은 공급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즉, 빵처럼 밤새 구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에 나서지 않으면 가격의 급변동을 피하기 힘들다.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서 주요 재정지표를 매년 전망하는 것처럼 강화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주택 재고량과 공급계획 등에 관해 중기적인 시각에서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도 국토교통부에서 10년 단위로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주기가 너무 길어서 상황 변화를 전망치에 반영하기가 어려우며, 전망의 정확도 또한 낮다. 주택가격 급락 등의 마이너스 쇼크도 발생할 수 있는데 위원회 주도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측 시스템 등을 사전에 갖춰 놓는다면 효과적인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립적 위상을 갖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할 필요

주택 재고량과 공급계획 등에 대한 중기적인 목표와 관리 필요

최근 연금시장의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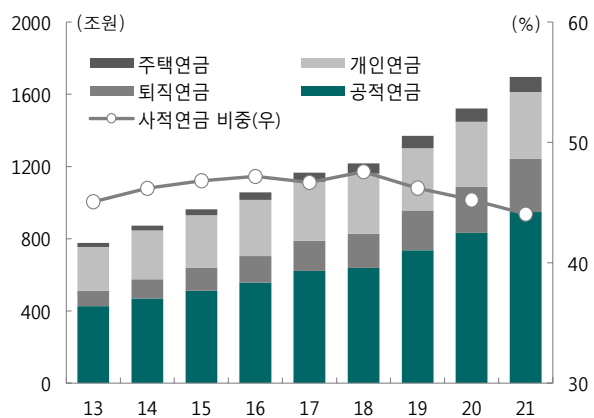
정희수 연구위원(heesoo_jung@hanafn.com)

국내 연금시장은 명목 GDP 대비 8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사적연금시장의 비중은 3년 연속 감소하였다. 사적연금시장의 주된 변화는 연금보험의 위축과 개인형 IRP의 급성장, 연금펀드 중심으로 20~30대 신규 가입 증가, 퇴직연금의 예금·펀드비중 확대, 중신형 연금수령 증가 등이다. 향후 사적연금시장이 포트폴리오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개인형 IRP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산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세제혜택, 일시금 인출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21년말 기준으로 국내 연금시장은 전년비 11.3% 증가한 1,737조원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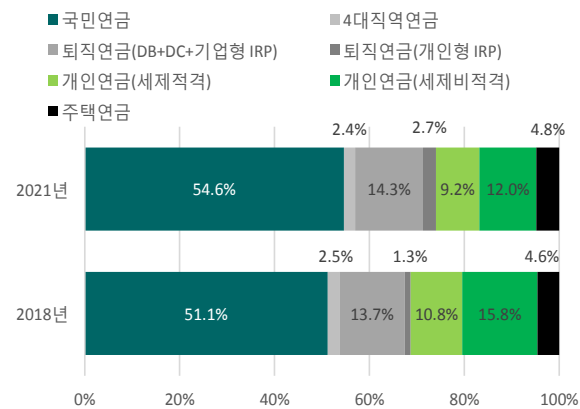
-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연금시장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명목 GDP 대비 84%를 차지
 - '21년말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4대 직역연금)은 948.7조원에 이르고,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은 747.2조원을 기록
 -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연평균 9%를 상회하는 등 사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적연금의 성장을 견인
- 다만, 사적연금 비중은 '18년 46.4%에서 '21년 43.0%로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최근 3년간 사적연금의 증가율은 공적연금보다 낮은 연평균 8.8% 수준
- 유형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5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개인연금(세제적격+세제비적격)과 퇴직연금이 각각 21.2%, 17%, 주택연금이 4.8%를 차지

■ 국내 연금시장의 규모 및 사적연금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 연금 유형별 비중 변화 (2018년 vs 2021년)



자료 :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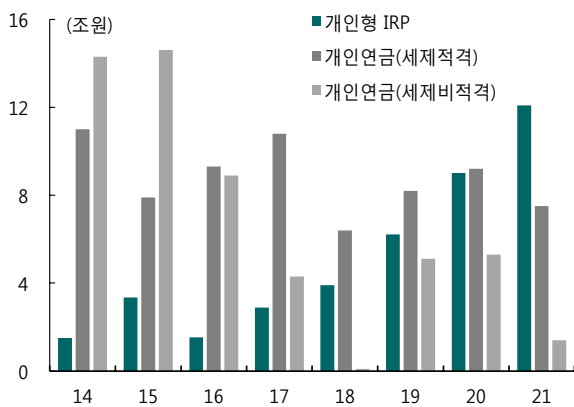
■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연금에서 개인형 IRP는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연금보험은 위축

- 개인형 IRP는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비 35.1%(+12.1조원) 증가한 46.5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운용수익 증가분은 4.8조원을 차지
 - 특히, 퇴직에 따른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이전, 퇴직보험·신탁에서 이전된 금액이 16.9조원이었으나 퇴직 후 대부분 일시금 형태의 퇴직급여로 지급
-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 연금은 연금펀드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의 증가폭 둔화로 전년비 5%(+7.6조원) 증가에 그친 상황
 -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 건수가 '18년 488.7만건에서 '21년 455만건으로 감소하고 연금신탁도 신규 가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98.7만건에서 81만건으로 감소
 - 반면, 연금펀드는 주식시장 호조로 '18년 83.9만건에서 '21년 302.6만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적립금 규모도 12.2조원에서 24.3조원으로 2배 증가
- 세제비적격 연금도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0.7% 증가하였으며, '18년 이후 증가율은 연평균 2% 증가에 그침

■ 지난해 세제적격 연금은 20~30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계약당 납입액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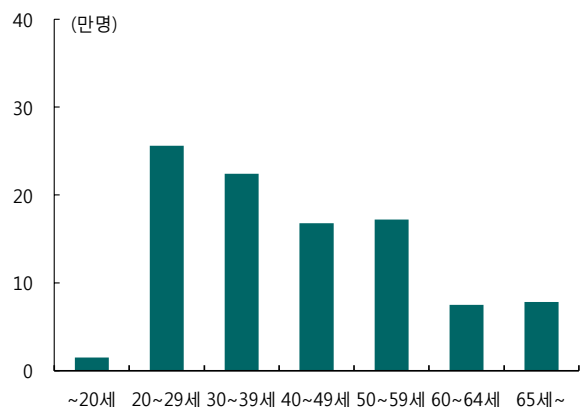
- 지난해 20대와 30대 가입자 수는 각각 전년비 25.6만명, 22.4만명 증가해 40~50대 증가분을 상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30대 이하 비중이 27.8%로 확대
 - 이러한 현상은 연금펀드 계약 건수의 급증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다양한 연금자산관리 App이 출시되면서 젊은 층의 관심이 집중
 - 연령별 비중('21) : 20대 9%, 30대 18.1%, 40대 26%, 50대 28.7%, 60대 이상 17.5%
- 계약당 납입액도 '18년 235만원에서 '21년 262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연금의 연간 증감액



자료 : 금융감독원

■ 세제적격 연금의 연령별 가입자 수 증감 ('21년)



자료 : 금융감독원

[1]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세전) 시 기존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개인형 IRP로 이전하도록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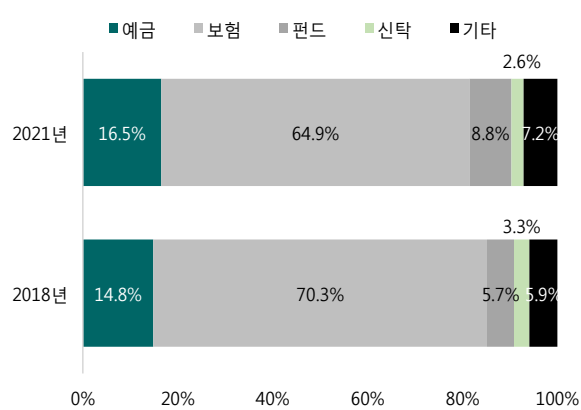
■ 사적연금의 운용상품별 비중을 보면 보험상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예금과 펀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전체 사적연금에서 보험상품 비중은 '18년 70.3%에서 '21년 64.9%로 낮아진 반면, 예금은 14.8%에서 16.5%로, 펀드는 5.7%에서 8.8%로 증가
 - 예금의 경우 퇴직연금 중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비중이 2.3%에서 19%로 급증한 것에 기인하고,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펀드 비중이 확대
- 퇴직연금에서 DB형은 보험, DC형·개인형 IRP의 펀드 비중이 빠르게 증가
 - DB형('18→'21) : 예금 31.6%→26.1%, 보험 49.5%→54.8%, 펀드 4.3%→2.8%
 - DC형('18→'21) : 예금 58.7%→55.9%, 보험 17.2%→17.3%, 펀드 15.2%→19.2%
 - 개인형 IRP('18→'21) : 예금 45.7%→46.2%, 보험 12.6%→7.1%, 펀드 9%→31.8%
- 특히,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상품 편입 비중이 DC형과 개인형 IRP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익률 개선을 위한 가입자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
 - 실적배당형 비중('18→'21) : DB형 4.8%→4.8%, DC형 15.9%→20.7%, 개인형 IRP 24.3%→34.3%

■ 한편,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이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개인연금의 종신형 연금수령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연금 본의의 특성에 맞는 질적 변화도 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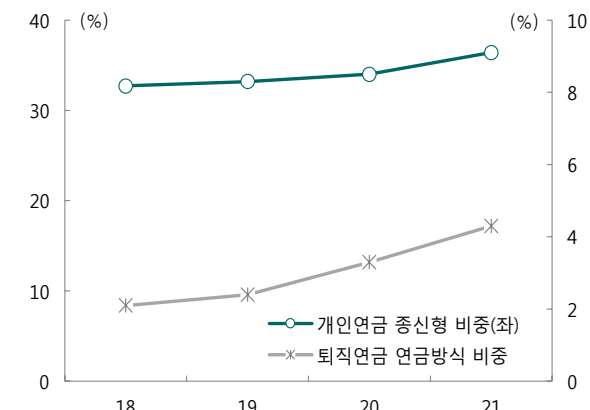
- 퇴직연금에서 연금수령 계좌 비중은 '18년 2.1%에서 '21년 4.3%로 증가하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21.4%에서 34.3%를 연금으로 수령
- 또한, 장수리스크를 해소하기에 적합한 연금보험의 종신형 연금수령 비중이 '18년 32.7%에서 '21년 36.4%로 증가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기여
 - 다만, 연 500만원 이하 수령자가 82.5%를 차지할 만큼 수령금액은 적은 편

■ 사적연금의 운용 상품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 연금 유형별 수령방식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 향후 사적연금시장에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

-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
 - 공적연금에서 나타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적연금을 활용
- 최근 2년 동안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머니무브 현상이 연금시장에도 영향을 준 만큼 젊은 층의 유입세 지속과 함께 실적배당형 상품비중이 증가할 전망
 - 다만, 연금 특성을 반영해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연금 운용에 있어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할 수 있는 개인형 IRP 중심으로 사적연금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 보험, 신탁, 펀드 등 단일상품에 가입하는 세제적격 연금보다 예금(저축은행 정기 예금 포함),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TDF(Target Date Fund)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IRP의 장점이 부각
 - 특히,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급여가 개인형 IRP로 이전되는 만큼 개인형 IRP로의 자금유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편, 퇴직연금시장도 DB형 중심에서 직접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한 DC형과 개인형 IRP로 전환되면서 연금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정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 성장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

- 공적연금은 3층 연금구조 하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연금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고 나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
 - 공적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령 시기의 상향조정 등을 검토하고, 특히 연금수령 시기의 조정은 정년 연장과의 연계를 고려
- 사적연금도 중산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 가입과 연금방식으로서의 수령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예를 들어, 연금의 세액공제 한도 확대, 주택연금의 대상 범위와 한도 조정, 연 1,200만원 분리과세 한도 확대, 개인형 IRP로 이전되는 DB·DC형 퇴직급여와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 제한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하는 연금자산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연금 자문서비스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Capgemini, 전통 은행들에 개인화된 가치 제공 제언

이재완 수석연구원(jwan.lee@hanafn.com)

디지털화와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의 등장으로 고객들이 은행에 기대하는 니즈가 변화했다. 하지만 전통 은행들은 민첩한 핀테크와 기술기반 회사들에 비해 제반 인프라가 뒤쳐져 있어 고객 니즈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널에 상관없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도 옴니채널 전략을 제고하고 BaaS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화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으로 고객들이 은행에 기대하는 니즈 변화¹⁾

- 고객들은 디지털(Digital)과 물리적(Physical) 환경을 연결하는 ‘Phygital’ 여정이 채널간 정교하게 연계되는 것을 기대
-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인사이트, 고객친화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객경험을 세심하게 조율하는 것이 고객확보의 핵심으로 부상
- 그러나 Capgemini의 소비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은 은행들이 ‘연결된 경험’, ‘개인화 경험’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응답
 - 응답자의 52%가 ‘은행은 재미없다’, 45%가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44%가 ‘개인화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

■ 전통 은행들은 뒤쳐진 제반 인프라로 고객의 니즈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


- 핀테크와 디지털 기반의 회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초개인화 가치를 제공하며 고객의 기대에 대응하는 반면, 전통 은행들은 오래된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
- Capgemini의 글로벌 은행 경영진 조사 결과, 95%가 legacy 시스템과 코어뱅킹 모듈이 데이터를 최적화하는데 저해된다고 응답
- 또한 전통 은행들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토로
 - 데이터기반 마케팅의 가장 큰 우려사항에 대한 응답률 : 데이터 신뢰성 80%, 인사이트 도출 73%, 분석을 위한 자원 부족 70%

[1] “World Retail Banking Report 2022: Incumbent banks must embrace data-centric capabilities to drive personalized customer experiences”, Capgemini, 2022.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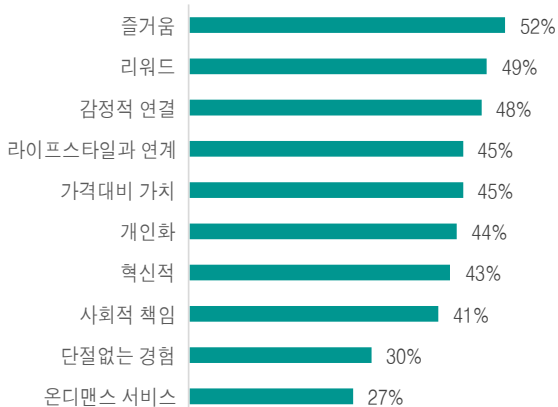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채널에 상관없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 디지털에 능한 은행들은 각 채널들의 역할, 선호 채널 간 결합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 캐나다의 CIBC는 온라인 및 대면으로 즉각적이고 일관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의 cookies에 의존하지 않고 자사 cookies를 활용하는 고객경험관리 솔루션을 개발
- 또한 전통적인 상품과 비금융 라이프스타일 결합 상품을 확대함과 동시에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로 전환을 시도
 - 호주의 디지털뱅크 Volt Bank는 BasS platform을 통해 핀테크, 소매사업자, 부동산 중개사의 앱에 은행 상품과 서비스를 삽입하여 제공
- 은행 경험 개인화를 위해서는 CMO(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기존 제품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의 마케팅 전환 준비는 미흡
 - 고객기반 전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격리되어 있는 것이 큰 원인
 - 글로벌 은행 경영진 조사 결과 CMO의 22%만이 고객경험을 관리, 맞춤화하는데 필요한 전체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응답

■ 국내 금융회사들도 옴니채널 전략을 제고하고 BaaS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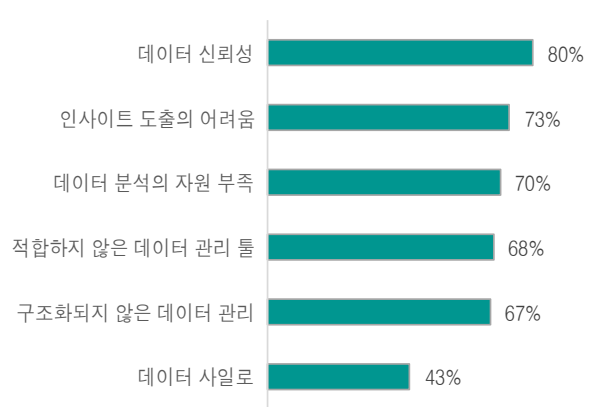
- 국내 금융회사들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고객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솔루션 개발을 제고
 - 오프라인 채널을 아우르는 옴니채널은 핀테크, 빅테크와 차별화된 경험 제공 가능
- 또한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 강화와 더불어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BaaS모델) 도입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 

■ 주거러 은행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가치



주 : 고객서베이 조사 결과(N=8051)
자료 : Capgemini

■ 은행이 직면한 마케팅과 연계된 데이터 챌린지



주 : 글로벌 은행 경영진 조사 결과(N=142)
자료 : Capgemini

미래 의료의 청사진 디지털 헬스케어

이 기 홍 수석연구원(kihong.lee@hanafn.com)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질병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스마트 기기 대중화, 빅데이터, IoT, AI의 등 ICT 기술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급격히 성장 중이며, 2027년까지 연 평균 19%의 높은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美 빅테크 기업은 각자 그리는 미래 청사진을 기반으로 M&A, 협업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투자 중이다. 반면 국내는 규제로 인해 투자에 어려운 환경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¹⁾

-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2020년 1,525억 달러에서 연 평균 19% 성장하여 2027년에는 5,09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기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모바일헬스가 864억 달러로 가장 크고, 디지털 보건의료 156억 달러, 원격의료 58억달러 순으로 규모를 형성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기준 미국(41.1%), 유럽(27.4%), 중국(8.3%), 일본 (5.2%) 비중의 순으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며 성장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14년 3조원 규모에서 연 평균 25% 성장하여 2020년 14조원 규모에 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²⁾

■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은 ICT 발전과 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기인

- 스마트 기기 보급과 빅데이터, AI, IoT 등 발전된 ICT 기술이 헬스케어 산업과 융합하여 질병 예방, 치료, 건강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
 - 특히,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시공간 제약이 없는 진단서비스가 매력적
 - ※ 디지털 헬스케어는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디지털 치료제, 3D 프린터, 의료 인공지능, DTC유전체, 스마트병원 등을 모두 포함
- 질병에 대해 치료에서 관리·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 중
 -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스마트 기기 대중화가 맞물리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1] "Digital Health:Global Market Trajectory & Analytics", Global Industry Analysts, 2020

[2]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동향과 주요 핵심 기술/제도 이슈", 한국바이오협회, 20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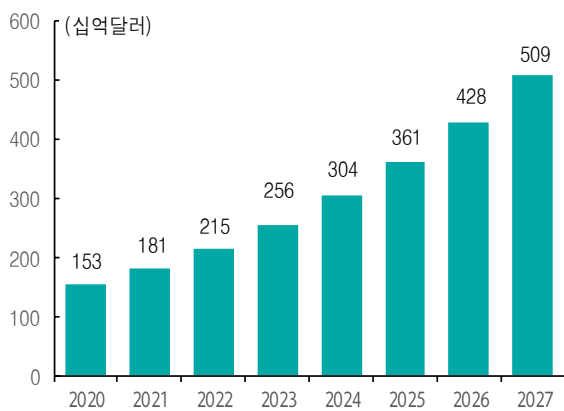
■ 美 빅테크 기업은 각자의 청사진을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³⁾

- Amazon은 유통을 기반으로 인수 및 협업을 통해 시장에 진출 중이며, 약 배달 서비스를 시작으로 가상 진료 및 원격 의료를 위한 의료 생태계 구축에 노력
 - 미국 최대 원격의료 서비스 회사인 Teladoc과 협업을 통해 AI스피커로 간단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
- Apple은 애플워치 등 자사의 디바이스를 핵심 허브로 활용하여 고객에게 많은 건강 기록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치있는 임상 연구 툴 개발에 노력
- Alphabet은 데이터와 AI 기술 기반으로 정밀 의학을 주도하기 위해 진출 중이며, 부족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Fitbit을 인수하며 스마트 워치 시장 진입을 예고
- Microsoft는 자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Azure을 기반으로 미래 의료 클라우드 시장 선점을 위해 아마존 및 구글과의 경쟁에 집중

■ 국내도 관련 산업 육성, 발전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한 청사진이 필요

- 해외는 미국의 ‘21세기 치료법’,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 독일의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등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도출
- 국내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등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어려운 규제 환경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
 - 다만, 원격진료가 코로나19로 일부 완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 발생 방지 및 민감성이 높은 개인 의료 정보의 보안 강화에도 노력할 필요 

■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GIA(2020), 한국바이오협회(2022.1) 재인용

■ 美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강점·약점

빅테크	강점	약점
Alphabet	· 클라우드 'Google Cloud' · 생명 공학 · AI 데이터 분석	· 부서별로 분할된 이니셔티브
Amazon	· 클라우드 'AWS' · 음성인식 기술 · 원격의료 서비스 · 온라인 약국 'PillPack'	· 초기 단계 프로젝트가 많음
Apple	· 애플워치 · 건강관련 연구 기능 · iPhone 기반 소비자	· iOS의 한계 · 애플워치의 혼재된 임상 효과
Microsoft	· 클라우드 'Azure' · 게놈 데이터 분석 · 헬스 봇	· 고객 대면 서비스 부족

자료 : Company filings, 재편집

[3] "BIG TECH IN HEALTHCARE: Here's who wins and loses as Alphabet, Amazon, Apple, and Microsoft target niche sectors of healthcare", Insider Intelligence, 2022,4,15

금리: 美 고강도 긴축+경제 연착륙, 가능할까?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국내금리도 긴축 우려로 상승하다 국채 수급불안 완화 및 안전자산 선호로 반락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예상되며 美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견조한 현 편더멘탈 고려 시 단기 내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금리는 5월 금통위에서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속 경기둔화 우려 확산되며 변동성 확대

- 美 4월 CPI(YoY 8.3%, MoM 0.3%)가 3월(8.5%/1.2%) 대비 하락했으나 시장 컨센서스(8.1%/0.2%)를 상회하며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이 지속될 우려
 - 특히 인플레이션 정점론의 근거였던 근원 CPI(MoM 0.6%, 3월 0.3%)가 항공운임(+18.6%), 주거비(+0.5%) 등 서비스 부문(+0.7%)의 상승압력 확대로 반등
- 5월 FOMC에서 연준은 ‘빅스텝(50bp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6월부터 QT 실행을 발표, 영국(BoE)과 호주(RBA) 또한 고물가 지속에 따른 매파적 기조를 견지
 - BoE는 4회 연속 금리인상(0.75→1.00%)에 이어 금년 4Q CPI 전망을 10.25%로 상향 조정, 내년 GDP 역성장(-0.25%)을 우려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시사
- 美 금리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와 그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맞물리며 변동성 확대(美 2/10년: 4.25일 2.63/2.82 → 5.6일 2.73/3.13 → 12일 2.56/2.85)


■ 국내금리는 통화긴축 우려에도 안전자산 선호 강화 및 국채 수급부담 완화로 반락

- 4월 CPI(YoY 4.8%)가 13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성장 하방압력을 제한적으로 보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억제 필요성을 강조
- 정부가 2차 추경(36.4조원)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대신 초과세수 및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방침을 밝히자 국채 수급 부담이 완화되며 시장금리가 큰 폭 하락
 - 국고 3/10년(%): 4.25일 2.86/3.18 → 5.4일 3.18/3.43 → 13일 오전 2.89/3.21)
- 한편 기업들은 조달금리 급등·투자심리 위축으로 회사채 발행에 난항, 이에 CP 등 단기자금 조달을 확대(연초~5.12일 CP 순발행(조원): '21년 15.1→'22년 -23.2)
 - 회사채 순발행(1~5월 월평균, 조원): '20년 2.0→'21년 2.7→'22.5.12일 기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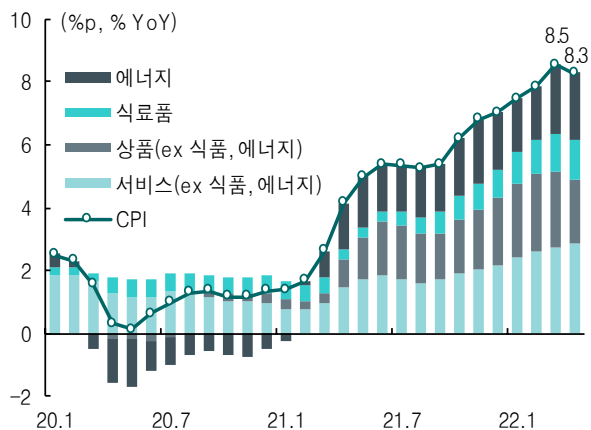
■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美 경제의 연착륙 가능 여부에 대한 논쟁 확대

- 美 인플레이션은 대외(러시아 전쟁, 中 봉쇄) 및 대내(임금상승, 주거비)영향으로 상승 흐름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이되는 등 장기화가 불가피
- 더욱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뒤늦은 정책 대응을 고려할 때, 연준이 경기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물가상승세 통제에 성공할지에 대한 의구심 확산
 - 역대 연준의 긴축 사례(9건)에서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는 3건에 불과
 - 파월 의장은 美 경제가 충분히 통화긴축을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경제 연착륙을 보장할 수 없다고 입장을 선회
- 다만 美 가계 초과저축(\$2.5조)과 타이트한 고용상황, 경제 리오프닝과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견조한 펀더멘털이 오히려 연준의 긴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 6월 75bp 금리인상 가능성 등 연말 美금리상단이 3%에 달할 것이라는 견해 부각

■ 국내금리는 대외요인에 연동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높은 변동성 지속 전망

- 미국 금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 기조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중장기물의 경우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우려가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 국내도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긴축 기조에 따라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단기물 중심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
 - 5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등 경기판단과 이창용 총재의 정책 스탠스 확인이 필요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2.90%~3.15%, 3.15%~3.35% 범위로 전망 

■ 미국 부문별 소비자물가



자료 : BLS

■ 역대 연준의 통화긴축 사례

시기	경기침체 시기	기준금리 인상폭/고점(bp/%)	CPI 고점(%)	경착륙/연착륙
67.7~69.8	70.1	540	5.5	연착륙
72.2~74.7	73.12	960 / 13.0	11.5	경착륙
77.1~80.4	80.2	1300 / 20.0	14.6	경착륙
80.7~81.1	81.8	1000 / 18.0	13.2	경착륙
83.2~84.8	-	315 / 11.8	4.9	연착륙
88.3~89.4	90.8	325 / 9.8	5.0	경착륙
93.12~95.4	-	310 / 6.0	3.1	연착륙
99.1~00.7	01.4	190 / 6.5	3.8	경착륙

주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위기 제외
 자료 : Landing Hard and Soft: The Fed, 1965-2020

외환: 최근 급등은 과도하나 불안 요인도 多

최 제 민 수석연구원(jeminchoi@hanafn.com)

원/달러 환율은 미 인플레이 지속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위안화 약세 심화로 장중 1,290원을 상향 돌파하고 종가기준으로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5월 FOMC와 4월 미 소비자물가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중국 내 봉쇄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원화 약세를 더욱 자극했다. 최근 환율 급등세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인플레이와의 전쟁, 중국 내 코로나 상황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당분간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美 인플레이와 긴축 우려 및 중국 경제 우려 등으로 급등세 시현

- 원/달러 환율은 5월 FOMC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FOMC 직후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풀이됨에 따라 1,270원대로 상승
- 그 후 美 4월 CPI가 시장의 예상을 초과해 시장불안 속 안전자산선호가 강화되고 중국 경기 우려發 위안화 약세가 맞물려 2009년 7월래 최고치(1,288.6원) 경신
 - 다만, 이후 위협회피 완화 및 당국 개입 경계 등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


■ [국제 환율] 달러화는 인플레이 및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

- 달러화는 5월 연준의 빅스텝 이후 매파적 행보 지속 우려와 더불어 미국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20년래 최고치 경신
 - 美 4월 CPI(8.3%)는 전월(+8.5%)보다 둔화되었으나 시장 예상치(8.1%) 초과했고 근원물가도 전년대비 6.2%(전월대비 0.6%) 상승해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
- 유로화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사태에 따른 유럽 내 에너지 수급 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약세 시현
 -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적 국가의 기업 제재 조치를 통해 폴란드를 경유해 유럽으로 운송되는 가스관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공표
- 엔화는 인플레이 우려 확산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위상이 부각되며 강세
- 위안화는 상하이 지역의 봉쇄가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내 봉쇄 확대 및 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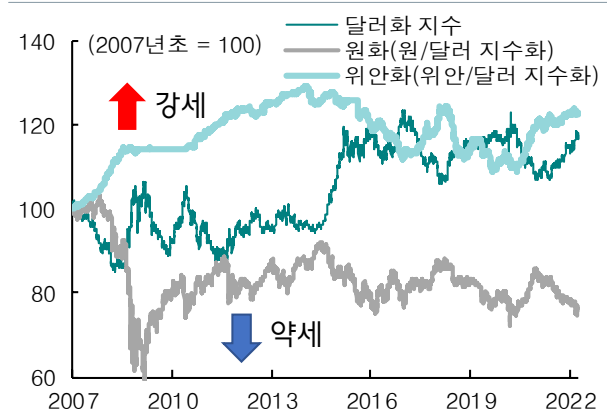
■ 달러화 강세 압력 이어지는 가운데 위안화 약세 가담으로 원화 변동성 확대될 소지

- 원화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달러화 강세 흐름에 연동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3월말 상하이 봉쇄 이후에는 위안화 약세와의 동조화도 강화되며 약세 심화
 - 한국은 금융시장과 무역 연계성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G2)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준의 긴축 가속화와 중국 경제 둔화에 더욱 취약한 구조
- 팬데믹 이후 중국은 해외투자 순유입에 따른 달러 유입세가 이어졌으나 한국은 해외 투자 증가로 유출이 늘어나면서 위안화와 원화 가치 디커플링 심화
 - 또한,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위안화 활용 증가도 위안화 강세에 일조
- 다만, 최근 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기의 가파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
 - 원화는 위안화 강세보다는 약세에 강하게 동조화되는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음
- 향후 연준의 긴축 가속화로 주요국과 연준의 통화정책 차별화 속 달러화 강세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안화 약세 심화시 원화 상승 압력 가중될 우려

■ 환율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측면 있으나 잠재적 불안 요인 많아 하향 안정 기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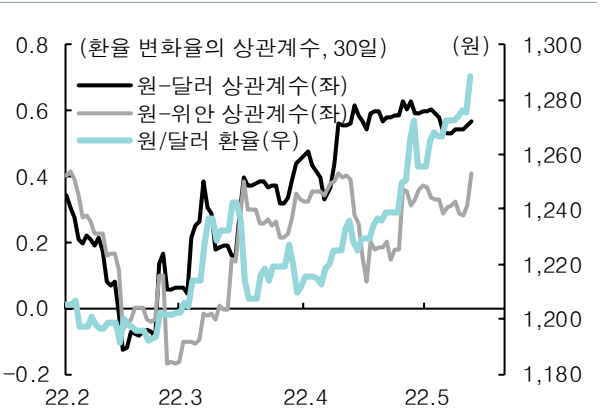
- 최근 1,290원 내외를 넘나드는 환율 수준은 과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 실제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
- 다만, 경제적 예측이 어려운 전염병과 전쟁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인플레이 확산 및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공행진 지속될 전망
- 특히, 과거 위기 때와 달리 환율이 한 순간에 급등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레벨을 높혀왔기 때문에 전쟁과 인플레이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다면 하향 안정 기대 難
 -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 레인지는 1,270원~1,300원으로 제시 

■ 원화, 달러화, 위안화 추이



자료 : Bloomberg

■ 원·위안·달러화 변화의 상관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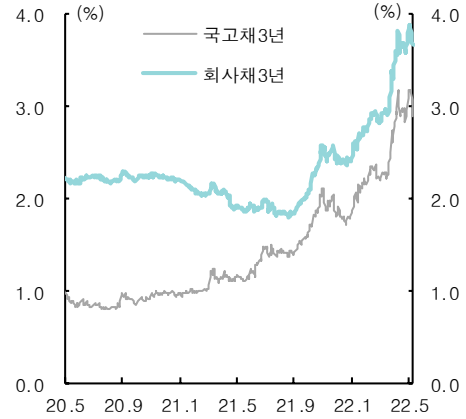


자료 : 연합인포맥스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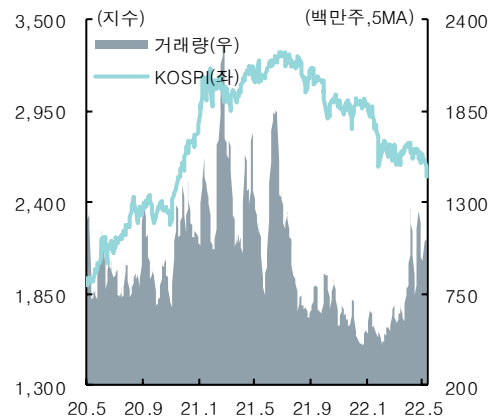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4월말	1.53	1.72	2.26	3.68	2.96	3.17
5월06일	1.42	1.72	2.34	3.87	3.15	3.37
5월09일	1.34	1.72	2.32	3.80	3.06	3.32
5월10일	1.36	1.72	2.29	3.78	3.05	3.30
5월11일	1.48	1.72	2.25	3.69	2.93	3.16
5월12일	1.42	1.72	2.28	3.66	2.90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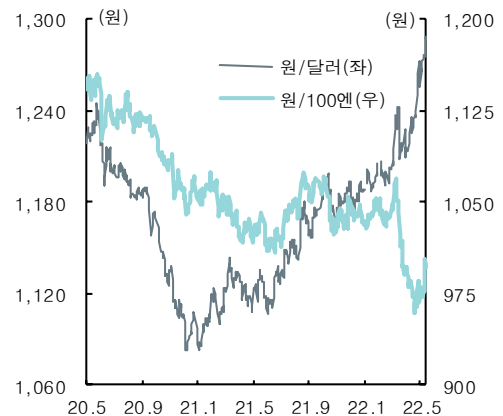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4월말	2,695.1	126,648	975	143
5월06일	2,644.5	105,954	1,334	-4,863
5월09일	2,610.8	92,897	893	-1,977
5월10일	2,596.6	108,425	842	-3,177
5월11일	2,592.3	86,083	680	-2,900
5월12일	2,550.1	121,679	900	-2,821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4월말	1,255.9	967.0	190.0	1,324.0
5월06일	1,272.7	974.4	190.9	1,342.1
5월09일	1,274.0	977.8	189.2	1,345.0
5월10일	1,276.4	978.2	189.5	1,343.9
5월11일	1,275.3	980.8	189.7	1,340.6
5월12일	1,288.6	1,003.8	189.8	1,3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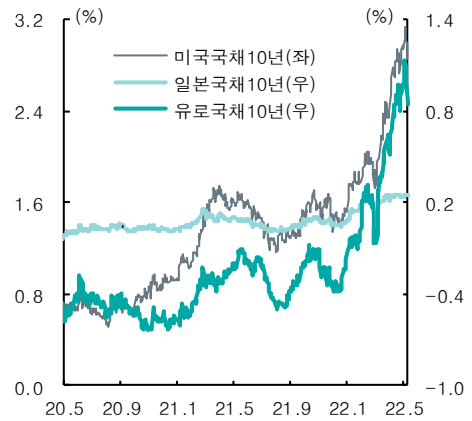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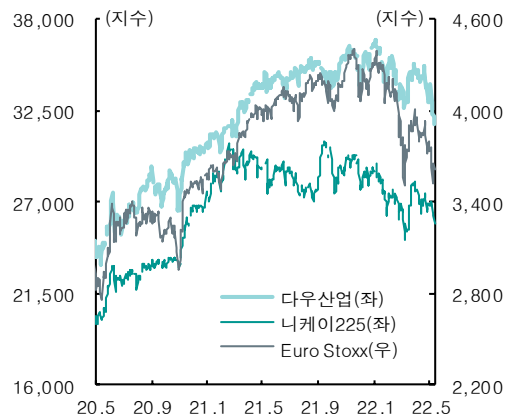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4월말	0.32	1.33	2.71	2.93	0.23	0.94
5월06일	0.82	1.40	2.73	3.13	0.24	1.13
5월09일	0.82	1.40	2.59	3.03	0.25	1.10
5월10일	0.82	1.40	2.61	2.99	0.25	1.00
5월11일	0.82	1.42	2.64	2.92	0.25	0.99
5월12일	0.82	1.41	2.56	2.85	0.25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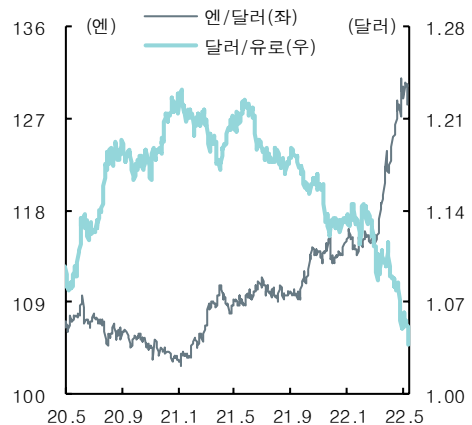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4월말	32,977.2	26,847.9	3,047.1	3,802.9
5월06일	32,899.4	27,003.6	3,001.6	3,629.2
5월09일	32,245.7	26,319.3	3,004.1	3,526.9
5월10일	32,160.7	26,167.1	3,035.8	3,554.8
5월11일	31,834.1	26,213.6	3,058.7	3,647.9
5월12일	31,730.3	25,748.7	3,055.0	3,613.4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4월말	129.77	1.054	105.4	1,911.7
5월06일	130.53	1.055	107.8	1,882.8
5월09일	130.24	1.056	108.0	1,858.6
5월10일	130.41	1.053	103.1	1,841.0
5월11일	129.93	1.051	102.9	1,853.7
5월12일	128.34	1.038	102.8	1,824.6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0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2년 5월 14일 인쇄

2022년 5월 16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0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